

# 중도일보

1951년 창간

中 都 日 報

joongdo.co.kr

COI란?	COI는 IETF(국제기구)에 URN NID로 등록된 UCI의 국가 단위 표준 식별체계 표기법입니다. <a href="#">자세한 내용보기</a>		
COI	<a href="#">G700:RA106+01400351-01400351:20091112:01400351.2009111210002827712:1</a>	제호	13322
RA기관	언론재단	서비스명	뉴스인증 서비스
		면번호	6

## 문화재단-대전시 이관사업 '동상이몽'

재단 '창작지원 일색... 시 대리기관 될까 우려'

市 '업무부하 고려 급한일 부터 넘긴 것' 설명

[대전=중도일보] 대전문화재단(이하 재단)과 대전시가 최근 시에서 문화재단으로 이관된 사업들을 놓고 '동상이몽'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.

재단은 지난 6일 창립기념식 이후 대전시로부터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 사업과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,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 6개 주요 사업을 이관 받았다.

이들 사업은 대부분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지원과 관련한 사업들로 기존에 시가 다뤘던 문화예술 관련 사업 중 비교적 비중있게 다뤄졌던 것들이다.

문화바우처 사업이나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 등 교육지원 사업 일부와 국악단체 창작활동 지원 등 지자체가 주관했던 일부 사업은 '미정' 상태로 이관되지 않았다.

재단 관계자들은 이처럼 이관사업 대부분이 '창작지원' 분야에 치중되자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됐던 시 대리업무기관으로의 전략을 우려하고 있다.

실제로 재단은 창립초기부터 문화예술인에 집중됐던 지역의 지원정책 방향을 생산자(문화예술인)와 매개자(문화예술기관), 수용자(생활예술인) 등 문화예술계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균형정책을 강조해왔다.

이는 이관되지 않은 여러 사업들과 각종 자체사업을 통해 기존 정책이 가졌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.

하지만 대전시는 아직 업무가 원활하지 않은 초기에 한 번에 많은 사업을 줄 경우 업무가 마비될 수 있고 또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있는 만큼 우선 급한 사업을 이관한 것이라는 설명이다.

시 관계자는 “당장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은 유보 상태로 서류만 넘겨줬고 재단에서 여력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나머지 관련 사업도 넘겨 줄 계획”이라며 “창립 초기 업무여건을 고려한 것이지 일부러 주지 않는다거나 다른 의도가 있어 주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니다”고 설명했다.

이에 대해 재단 관계자는 “균형정책에 따른 타 지역의 성공사례를 주시하다 보니 혹시 시가 문화재단의 성격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었다”며 “하루 빨리 업무에 적응해 균형 잡힌 정책을 펼치겠다”고 말했다. /강순욱 기자 ksw@

기여자	강순욱 기자	제작일	2009-11-12	등록자	중도일보
저작권자 역할	언론사	기여자 ID	romero777	컨텐츠 유형	TEXT
저작권 정책?	본 기사는 <b>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어문 저작물</b> 로써 사전동의나 허락 또는 계약 없이 딥링크 방식이나, 프레임 방식 등 무단 게재를 허용치 않습니다. 뉴스 콘텐츠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뉴스저작권 집중관리 단체인 한국언론재단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 ( <a href="http://dnc.kpf.or.kr/d1.htm">http://dnc.kpf.or.kr/d1.htm</a> ) 연락처 : (02) 2001-7859				